



국가직 7급 행정학

1. 총평

국가직 7급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7급 시험제도의 대대적 개편이후 첫 시험이니 만큼 낯선 시험제도하에서 시험준비를 하느라 마음고생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다들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준비했던 수험생에게는 합격에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차분하게 견뎀은 수험생들의 합격의 보상이 주어지기를 응원해봅니다.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문제는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고 따라서 생소한 지문들이 일부 출제되었을 때 시험장에서 느껴지는 체감난이도는 높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학 점수는 92점 이상이면 훌륭하고, 88점 이상이면 합격선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항별 해설은 영상과 아래에 문서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험의 당락은 우리가 학습해야할 기본적 내용(기존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관련내용)을 정확하고 단단하게 숙지해서 시험장에서 흔들림없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갈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컷 점수이상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1달 뒤에 또 지방직 7급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직 7급 일반행정의 경우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렬에 비해 2배 이상을 채용하는 시험이고, 올해의 마지막 공채시험이니만큼 이번 시험결과가 실망스러운 수험생들은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학습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시험을 거울삼아 끝까지 파이팅 하기를 응원합니다.

2.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4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5	행정환류	2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3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3	기출변형 문제	1	신유형 문제	1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	1	14	1	2	2

01 다음의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착이 어려운 예산제도는?

- 사업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 결정구조가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다.
- 행정부처의 직원들이 복잡한 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① 품목별 예산제도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③ 계획예산제도
- ④ 영기준 예산제도

【해설】 ③ [○] 계획예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의 정의가 어려우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특히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통제가 어렵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계획예산제도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의회가 **분석기법과 편성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712

▶ ③

02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
-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③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 ④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 【해설】 ① [O]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편성할 수 있다.
 ② [X] 우리나라의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③, ④ [O] 준예산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헌법 제54조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올바른 지문

-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summary |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을 위한 장치

구 분	기 간	국회의결	지출 항목	채택국가
준예산	무제한	불필요	한정적	현재 우리나라, 독일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우리나라 1공화국, 프랑스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Q 준예산

- ① 중앙정부의 경우 편성된적 X, 지방정부의 경우 성남시가 편성한 바 있음(2013년 예산안).
- ② 지출가능항목: ㉠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③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때(회계연도 개시 전 30일 X)
- ④ 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 제도를 운영
- ⑤ 사전의결원칙의 예외

0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 ④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해설】 ① [X]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③ [O]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처음 제정하였다(2004년). 이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써,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의회의 예산심의결과와 다를 경우, 직접적인 의사(주민)와 간접적인 의사(의회)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728

▶ ①

04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 ② 거래비용은 탐색비용, 거래의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다.

- 【해설】 ① [X] 거래비용은 시장에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비용은 인간의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치가 조직(계층제)**이다. 즉,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 ② [O] 거래비용은 감시비용, 거래관계의 유지비용, 정보비용 및 대체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③ [O] 거래비용이 조직내부의 명령체계나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적게 발생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며, 반대라면 회사나 정부(조직)가 더 적합한 형태가 된다.
- ④ [O] 거래비용이론은 민간부문의 조직들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156

▶ ①

0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②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③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개혁 시기 조정은 강제적 전략이다.

- 【해설】 ① [X] 경제적 손실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신분 및 보수 보장)는 피해집단이 저항하는 경우 유효한 전략으로 **기술적·공리적 방법**이다.
- ② [X]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 등은 저항의 근본적 해결책에 가까운 전략으로 **규범적·사회적 방법**이다.
- ③ [O]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촉진 등은 규범적·사회적 방법(저항의 근본적 해결책)에 해당한다.
- ④ [X] 개혁 시기의 조정(점진적 추진)은 **기술적·공리적 방법**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기술적·공리적 전략이다.
- ②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개혁 시기 조정은 기술적·공리적 전략이다.

summary | 강제적·기술적·규범적 전략의 비교

구 분	강제적 방법	기술적·공리적 방법	규범적·사회적 방법
효 용	긴급한 상황에서 개혁추진자가 강한 권력을 보유한 경우 유효	피해집단이 저항하는 경우,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저항인 경우 유효	저항의 근본적 해결책
한 계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억압	많은 비용소모와 장기적 효과가 담보되지 않음(근본적 대책이 아님).	시간과 노력의 소모가 큼.
예 시	•직위에 부여된 공식적 권한으로 명령 •신분상 불이익, 물리적 제재 •긴장조성 •권력구조 개편에 의한 저항세력 약화	•경제적 손실 보상 •신분과 보수의 유지 약속 •개혁의 가치와 개인 이득 명확화 •개혁 시기 조절(점진적 추진) •개혁절차·방법 운영 개선	•개혁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불만 노출과 해소의 기회 제공 •개혁수용에 필요한 시간 허용 •개혁의 가치와 기존 가치의 양립 가능성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촉진

0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 ㄴ.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ㄷ.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ㄹ.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ㅁ. 주민의 편의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ㄷ, ㄹ
-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해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다.

- ㄱ, ㄷ [O]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배분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제9조 【사무배분의 원칙】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ㄴ [O] **포괄성의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 제9조 【사무배분의 원칙】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ㄹ [O]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ㅁ [O] **중복배분금지의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동법 제9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848

▶ ④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기능이 있다.
- ②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③ 호혜주의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해설】 사회적 자본이란 인적·물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 ① [X]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제재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 ②, ③ [X] 사회적 자본은 상호신뢰, 호혜주의, 친사회적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적극적인 참여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 ④ [O]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summary | 사회적 자본 vs 인적·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물적 자본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 내재	개인이 개별적 소유
등가물의 교환 X	등가물의 교환 O
공공재	사적재
시간적 동시성 전제 X	시간적 동시성 전제 O
자본의 유지 위한 지속적 노력	자본 획득 → 보유
사용할수록 증가	사용할수록 감소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78~80

▶ ④

08 일반적인 조직구조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계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 ㄴ.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 ㄷ.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구조가 이뤄진다.
- ㄹ.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해설】** ㄱ [O] 계선은 상하 간 명령복종관계를 지닌 수직적 계층구조이며, 참모조직은 계선기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을 하는 수평적 구조이다.
- ㄴ [O] 부문화(부성화)의 원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연관된 업무를 묶어 조직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리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존재한다.
- ㄷ [X] 통솔범위의 원리는 상관의 능률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통제하는 대상인원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계층의 수와 통솔범위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저층구조가 형성되고, 통솔범위가 좁을수록 고층구조가 형성된다.**
- ㄹ [O]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들이 각자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ㄷ.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평적 분화가 일어나 저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고층구조가 이뤄진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352~354

▶ ②

09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 한다.
- ②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 ③ 권력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 ④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여성성이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한다.

【해설】 호프스테드(Hofstede)는 문화의 다양성을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시간관념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 ① [O]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불확실성 회피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은 불안이나 반대 또는 대립을 기피하고 안정과 합의를 원하게 되므로, 공식적인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 한다.
- ② [X] 집단주의는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중시하며 집단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으려 하므로 **개인 간 상호의존적인(느슨한 X) 관계를 중시한다.**
- ③ [O]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한 사회에 있어서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권력거리가 강한 경우 권력자의 결정이나 자신과의 지위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 ④ [O] 남성성 - 여성성 차원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경향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를 나타낸다.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야심차고 자기과시욕이 강하며 섬세함이 부족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441

▶ ②

10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업구조의 조합에 따라 리더의 상황적 유리성(situational favorableness)을 설명한다.
- ②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사용하여 리더를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로 분류했다.
- ④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 【해설】**
- ① [X] 피들러의 상황론(상황적응적 모형)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 리더와 부하의 관계, ㉡ 임무(과업)구조, ㉢ 직위에 부여된 권력(공식적 권한의 정도)이 있다.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변수로 본 이론은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리더십 상황이론(생애주기이론)이다.**
 - ②, ④ [O]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중간정도의 상황에서는 인간관계형이 적합하다.
 - ③ [O] 피들러는 리더의 효과성은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리더의 스타일을 LPC 점수를 사용하여 과업지향적 리더, 관계지향적 리더로 분류 하였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423

▶ ①

11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민주화에 기여
- ②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
- ③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
- ④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해설】 ①, ③ [O] 엽관주의란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한다.
 ② [O] 엽관주의는 선출직 정치지도자(집권 정치인)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이 용이하다.
 ④ [X] **실적주의의 장점에 해당한다.** 엽관주의는 정권 교체 시 공직의 대량경질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

summary | 엽관주의의 장·단점

장점 및 공헌	단점 및 폐단
① 특권적 정부관료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 ⇨ 민주정치 발달과 행정 민주화에 공헌 ②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 ④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가 용이	① 매관매직 등 정치적·행정적 부패를 초래 ② 행정의 전문성 저해 & 비능률성 야기 ③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훼손 ④ 관직의 남설을 통해 재정적 낭비를 초래 ⑤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음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464~466

▶ ④

1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 ③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집단화할 염려가 있다.
-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 【해설】 ① [O]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O] 직업공무원제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인하고,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실적에 따라 높은 상위 직책까지 일생을 근무하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제도이다.
- ③ [O] 직업공무원제는 폐쇄적 임용으로 인하여 공무원 집단이 보수적, 특권집단화 되는 경향을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④ [X] 직업공무원제는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제도이다.

summary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일체감 · 봉사정신 강화	① 특권집단화(민주통제 곤란)
② 엄격한 근무규율의 수용	② 폐쇄적 임용 ⇨ 공직취임기회의 제약&외부 전문가 임용 곤란
③ 온정적 관계의 발전	③ 공직침체(무사안일)
④ 행정의 계속성 · 안정성 · 일관성 유지	④ 전문화 방해
⑤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 (일반행정가)	⑤ 승진지망의 과열
⑥ 공직의 직업전문분야 확립에 유리	

13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회적 규제
- ② 보조금
- ③ 조세지출
- ④ 공기업

【해설】 ④ [O]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에는 정부소비, 직접 대출, 공기업, 경제적 규제 등이 있다.

summary | 행정수단의 특징(Salamon)

직접제공	간접제공
정부소비, 직접 대출, 공기업, 경제적 규제 등	계약, 바우처, 대출보증, 보조금, 손해책임법, 공공기관을 통한 공적 보험 등
강제	자발적 협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벌금 등	조세지출, 정보 제공, 손해책임법, 바우처 등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65, 66

▶ ④

14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정책평가 대상 확정
- ㄴ. 평가 결과 제시
- ㄷ. 인과모형 설정
- ㄹ. 자료 수집 및 분석
- ㅁ. 정책목표 확인

- ① ㄱ → ㅁ → ㄷ → ㄹ → ㄴ
- ② ㅁ → ㄱ → ㄷ → ㄴ → ㄹ
- ③ ㅁ → ㄱ → ㄷ → ㄹ → ㄴ
- ④ ㅁ → ㄷ → ㄱ → ㄹ → ㄴ

【해설】 ③ [O]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ㅁ. 정책목표 확인 → ㄱ. 정책평가 대상 확정 → ㄷ. 인과모형 설정 → ㄹ. 자료 수집 및 분석 → ㄴ. 평가 결과 제시 순이다.

summary | 정책평가의 단계

(1) 정책개요 작성 및 정책목표 규명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
(2) 평가성 사정	① 착수직전분석 :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의 기획을 위해 평가의 착수직전에 수행되는 조망적 차원의 평가기획 ② 평가성 사정 : 착수직전분석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일종의 예비 평가
(3) 평가 기 준의 설정	- 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의 수립단계 - 평가기준도 목표에 따라 변화
(4) 인 과모형의 설정	- 모형을 통한 현실세계의 단순화 ① 변수 선정, ② 변수 간 관계 설정, ③ 변수관계의 성격에 관한 명제 설정의 단계로 진행
(5) 평가 연 구설계	- 평가유형 결정과 구체적인 평가설계방안 마련 -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설계 등 활용
(6) 자료의 수집 · 분석	설문조사, 관찰, 면접, 문헌 및 정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7) 결과의 환류 및 활용	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책집행의 효과성 제고와 지식 축적에 활용

15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수용해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②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반행정가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다.

- 【해설】 ① [O] 개방형 인사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직의 개방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막고 공직을 새로운 기풍으로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활용된다.
- ② [X]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반행정가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X] 폐쇄형 인사제도는 젊은 사람에게 공직을 보람 있는 생업으로 삼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장려하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
- ④ [X]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의 기회가 많고 공무원의 지위 향상이나 경력 발전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쏟는다.

▶ 올바른 지문

- ②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보다 일반행정가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다.

summary | 개방형 vs 폐쇄형

구 분	개방형	폐쇄형
신규임용	전 등급에서 허용	최하위직에만 허용
임용자격	전문능력	일반능력
승진기준	최적격자(내·외부)	상위적격자(연공고려 내부 임용)
공직분류	직위분류제(직무 중심)	계급제(사람 중심)
신분보장	신분 불안정(임용권자가 좌우)	신분보장(법적 보장)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498~501



16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개인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다.
- ③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 균형정책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④ 대표관료제를 통한 조직 내 다양성 증대는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해설】 ① [O] 내면적(내적) 다양성은 가치관, 성격, 일에 대한 선호의 차이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면적(외적) 다양성은 성별, 인종, 민족, 나이, 장애상태 등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성차이를 의미한다. 사회구조와 문화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로 표면적·내면적으로 서로 다름을 지닌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② [O]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란 ‘표면적·내면적 차이를 지닌 다양한 노동력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을 말한다. 즉, 다양성관리는 ‘관리자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키는 과정 및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X]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 방안에는 대표관료제,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의 조화(WLB) 정책 등이 있다.
- ④ [O] 대표관료제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조하는 실적주의와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

▶ 올바른 지문

- ③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 균형정책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

▶ ③

1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상태에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 ②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은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 ③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끼워넣기(by oversight)와 미뤄두기(by flight)가 포함된다.
- ④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해설】 ① [X]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Cohen), 마치(March), 올젠(Olsen) 등이 주장한 모형으로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조직화된 혼란(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 모형이다.
- ② [X] 유동적 참여자에 대한 설명이다.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불분명한 것이다.
- ③ [O]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대표적으로 날치기 통과방식(= 간과, choice by oversight)과 진땀기 결정방식(= 탈피, choice by flight)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X]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는 참여자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또는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알지 못하거나 참여자 간에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조직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상태에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 ② 유동적 참여자는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 ④ 불명확한 인과관계(기술)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summary | 조직화된 혼란상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 선호)	의사결정이 진행되면서 선호를 발견 (참여자가 스스로의 선호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 or 선호가 서로 다른 상황
유동적 참여자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자들이 유동적임
불명확한 인과관계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불분명한 지식과 기술

18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 ③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한다.
- ④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 자체보다는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둔다.

- 【해설】 ① [O] 정책델파이는 참여자간의 갈등이 정책이슈에 내재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대안과 결과를 창조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어서 의견상의 차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또한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O] 정책델파이는 개별적 판단을 종합 시 의견의 중위값(medium)보다는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다.
- ③ [X] 정책델파이에서는 예측의 초기단계만 익명으로 응답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이후에는 참가자들 간 공개적 토론이 허용된다.
- ④ [O] 정책델파이의 참가자들을 '전문성' 자체보다 이해관계와 식견에 바탕을 두어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이 선정된다. 따라서 일반적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③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한다.

summary | 델파이 기법 vs 정책델파이

	전통적 델파이기법	정책델파이기법
적용	일반문제(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에 일반전문가	전문가 이외의 이해관계자 등 식견 있는 사람
익명성	- 완전한 익명성 (직접대면접촉의 상호토론 X) - 익명으로 솔직한 의견 반영을 기대	선택적 익명성 (초기단계에서만 익명성이 요구.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개적으로 토론)
통계	일반적인 통계처리	의견차이를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의	합의 도출(의견일치를 유도)	구조화된 갈등(유도된 의견대립)
토론	토론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or 대면토론
[공통점] : ① 주관적 미래예측 기법, ② 다수의 응답자, ③ 반복적 설문조사, ④ 통계된 의견처리, ⑤ 처리결과에의 환류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242, 243

▶ ③

19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은 것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발생한다.
- ② 제2종 오류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은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③ 제1종 오류는 α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β 로 표시한다.
- ④ 확률 $1-\alpha$ 는 검정력을 나타내며, 확률 $1-\bet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 【해설】
- ① [O] 1종오류는 옳은 영가설을 기각하고, 틀린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이다.
 - ② [O] 2종오류는 틀린 영가설을 채택하고, 옳은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이다.
 - ③ [O] 제1종 오류는 α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β 로 표시한다.
 - ④ [X] $1-\alpha$ 는 영가설이 옳았을 때 옳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신뢰수준이라고 하며 $1-\beta$ 는 영가설이 틀렸을 때 이를 틀렸다고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검정력이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확률 $1-\alph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내며, 확률 $1-\beta$ 는 검정력을 나타낸다.

summary | 정책오류의 유형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
옳은 영(귀무)가설을 기각	틀린 영(귀무)가설을 채택	- 정책 문제자체를 잘못 인정한 오류 - 메타오류(meta error) - 주로 의제설정과정, 문제의 인지와 정의 과정에서 발생
틀린 대립(연구)가설을 채택	옳은 대립(연구)가설을 기각	
- 효과없는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오류 - 정책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	- 효과있는 정책대안을 배제하는 오류 -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	

20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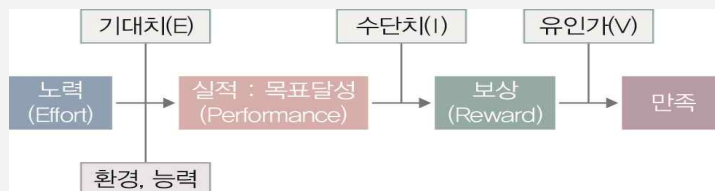
- 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 중 하나이다.
- ②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공정한 보상(reward)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
- ③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의 성과(performance)와 보상(reward)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 ④ 유인가(valence)는 개인이 특정 보상(reward)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 【해설】 ① [O] 브룸의 기대이론은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학습이론 등과 더불어 과정이론 중 하나이다.
- ② [X] 기대감(expectancy)은 노력(effort)이 성과(performance)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 ③ [O] 수단성(instrumentality)은 성과(performance)가 보상(reward)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 ④ [O] 유인가(valence)는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X]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성과(performance)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

summary | 브룸의 기대이론모형



2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②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③ 1984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제외한다.

- 【해설】 ① [○] 성인지 예산은 중앙정부의 경우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되었다.
 ② [×]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양성평등이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 성인지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의 많은 국가들에게로 확산되었다.
 ④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 포함)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국가재정법 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641~643



2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ㄴ.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ㄴ, ㄷ [O] 분권화 정리는 지역공공재의 생산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든 동일한 비용이 든다면,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그 지역에 적정량의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지리적 외부성에 따라 중앙-광역-기초의 정부간 '독점적' 재정기능 분담구조 제안하며, 다양한 지방정부가 파레토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면 사회전체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결국 개인선호가 다양해질수록 분권화를 통해 사회효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Oates, 1972).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927



2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용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 ② 기관(機關) 간 이용도 가능하다.
- ③ 세출예산의 항(項)간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 ④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

【해설】 ① [×]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3. 재해대책 자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 기관 간 이용도 가능하다.
- ③ [×] **항은 입법과목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전용×)할 수 있다.**
- ④ [×]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이며**, 전용은 사전의 결 원칙의 예외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용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이 필요하다.
- ③ 세출예산의 항(項)간 이용은 국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 ④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참고】 2022 신용한 행정학 p.682

▶ ②

24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사법부가 임명한다.
- ④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해설】 ① [X] 옴부즈만은 주로 국민의 불평제기에 의해 촉발되지만, 자체정보로 직권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 ② [O]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가용자원이 많지 않아 활동 범위가 제약되고, 시민의 불평·고충을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③ [X] 옴부즈만은 의회(입법부) 소속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행정부 소속인 경우도 있다.
- ④ [X]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시정조치의 법적 강제권한이나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공표·보고·권유·설득의 수단을 주로 사용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시민의 요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임명한다.
- ④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summary | 일반적 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의회가 임명	의회소속인 경우가 일반적
임무수행상의 높은 자율성	행정부로부터 독립(외부적·공식적 통제수단)
직권조사 가능	주로 국민의 불평제기에 의해 촉발(직권조사하는 경우도 있음.)
조사대상의 다양성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행위, 태만이나 과실도 조사 대상
간접적 통제	시정조치의 법적 강제 권한은 없으며, 공표·보고·설득의 수단. 일반적으로 조사권·시찰권 ○, 소추권 ×
간편·신속한 문제해결	사법부에 의한 판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함. ex) 우리나라의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60일 이내(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조정자·중재자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큰 제도

25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은 빅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형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각종 센서장비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 ④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해설】 ① [X] 빅데이터에는 사진, 오디오, 비디오, 소셜 미디어 데이터, 로그 파일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된다.**
- ② [O] 빅데이터는 정형데이터는 물론 반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 ③ [O]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 장비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 ④ [O]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처리 능력에 있어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사진은 빅데이터에 포함된다.

summary | 빅데이터의 특징(3V)

크기 (Volume)	데이터의 물리적 크기 / 기업데이터, 웹데이터, 센서데이터에서 페타바이트(PB) 규모로 확장된 데이터가 등장
다양성 (Variety)	데이터의 형태 /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반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
속도 (Velocity)	데이터의 처리 능력 /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할 수 있어야 함.